

# 의료 민영화 재앙을 막기 위한 보건의료노조 투쟁을 지지한다

박근혜는 지난 12월 13일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연달아 연두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 부문 “규제완화 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의료 민영화 추진 의지를 강력히 밝히고 있다.

의료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공공서비스다. 그러나 자본가들은 영리 추구 금지,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비 통제, 엄격한 심사평가 등 최소한의 공적 규제들을 완화해 병원에서 마음 놓고 돈 벌이를 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고 요구해 왔다.

### 자회사

어처구니없게도 박근혜는 대학병원 등이 편법으로 영리 자회사를 운영하는 것을 근거로, 중소병원에게도 이를 허용해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강변한다. 비정상상을 정상이라고 우기며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만든 자회사의 부대사업 분야를 다음과 같은 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바이오 등 연구개발 성과물 응용, 의료기기 등 구매, 의료기관 임대, 숙박업, 여행업, 외국인 환자 유치업, 의약품 개발, 화장품·건강보조식품·건강식품·의료용구의 개발·임대·판매, 의료기기 개발, 온천·목욕장업, 체육시설, 서점 등.

이렇게 되면 병원은 자회사의 여러 사업분야 중 하나로 전락할 것이다. 자회사가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배당하려면 일정한 수익을 내야 하고, 자회사에서 건물·기기·약품 등을 구입하거나 빌려 쓰는 병원은 똑같은 수익성을 요구 받을 것이다.

이 때문에 과잉진료와 온갖 끼워 팔기(건강보조식품·화장품·온천 등)로 환자 보호자들이 내야 할 돈은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를 감당하려면 민간의료보험을 하나씩 더 들어야 할 것이고, 삼성생명 등 민간보험사들만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다.

2009년에 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개인병원의 20퍼센트만 영리병원으로 바뀌어도 1년에 전체 국민이 내야 하는 의료비가 7천억~2조 2천억 원 늘어난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보험료



전면적인 의료 민영화를 막으려면 전면적인 투쟁이 필요하다.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은 그 구심이 될 수 있다.

가 대폭 오르거나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건강보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정부의 말을 믿을 수 없는 까닭이다.

정부는 대기업에게 공공부문을 넘긴다는 비판을 의식해 삼성·현대 등 재벌 병원이 법적으로 자회사를 만들 수 없으므로 대기업과는 관계없는 조처라고 말하지만 거짓말이다. 예를 들면 삼성은 삼성병원의 자회사를 만들 필요가 없다. 삼성전자가 다른 병원 자회사의 외부 투자자로 들어가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자회사가 삼성병원 환자들을 상대로 부대사업을 하면 된다.

이처럼 영리 자회사를 세우고 부대사업을 전면 확대하면 병원은 돈을 많이 벌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의료

비 폭등과 병원 노동자 해고로 돌아올 것이다.

한편, 기업들은 병원 사이의 인수·합병도 허용하라고 요구해 왔다. 지금은 병원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을 경우 남은 자산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돼 있다. 병원이 운영되는 동안 세금, 보험 등 정부재정이 투입됐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이는 세금 ‘먹튀’를 막기 위한 조처다.

### 의료비 폭등, 노동자 해고

그런데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이런 파렴치한 먹튀뿐 아니라 병원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동반될 것이다. 외국에서 비영리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바꿀 때 2년 안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이 바로 경력 있는 간호 인력을 해고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투자활성화 대책은 오히려 병원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공격하는 파괴적인 정책이다. 보건의료노조 내명명 정책실장은 이렇게 말했다.

“영리자회사가 허용되고 부대사업이 확대되면 이윤 창출을 위한 극심한 경쟁이 벌어질 것이고, 병원 노동자들은 단지 ‘비용’으로 계산돼 인력감축, 외주용역 확대, 비정규직 확대, 노동강도 강화 등 고통과 희생을 강요당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에 나

설 것을 선포”한 것은 의미가 크다. 보건의료노조는 최근 대의원대회에서 정부가 의료 민영화 정책을 강행할 경우 6월에 “산별 총파업”에 나설 것을 결의하고 이를 위한 특별기금 마련과 3~6월 투쟁 계획도 확정했다.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투쟁 계획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조직된 노동자들의 강력한 행동은 정치적 효과도 클 뿐 아니라 광범한 반대 여론을 결집시키는 구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지역대책위 활동 등으로 기층에서 연대를 다져 나간다면 광범한 대중의 지지를 얻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이는 지난 연말을 뜨겁게 달군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이영익 철도노조 위원장 직무대행도 보건의료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연대사를 통해 “당사자들이 힘차게 결의하고 싸운다면 국민들이, 많은 조직들이 언제나 지지하고 연대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근혜는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두려워 벌써부터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고 잡아떼는 한편 의사협회 등을 회유해 투쟁의 김을 빼려 하고 있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투쟁에 나서면 이를 중심으로 광범한 연대가 건설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의료 민영화에 제동을 걸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

병상 수 대비 병원 인력	
3.64명	0.66명
OECD 평균	한국
영리병원과 병원 인력	
영리병상 비율	병상당 인력
독일 30%	1.87명
영국 0%	7.1명

# 강릉·원주 의료원 매각 계획 중단하라

박근혜가 의료 민영화를 본격화하는 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강원도에서 아예 지방의료원 매각 계획이 흘러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강원도가 의뢰해 진행한 '강원도 지방의료원 발전방안' 연구 용역을 발표하며 강릉의료원과 원주의료원을 매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흥준표의 진주의료원 폐업 1년 만에 또다시 노골적인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진흥원 자체 평가와도 상반되는 결론이다. 원주의료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 "원주권역 내 2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원주의료원이 유일하다"고 실컷 그 중요성을 말해 놓고는 민영화가 필요하더니 말이다.

진흥원이 내세운 근거라고는 주변에 민간 의료기관이 늘었다거나 "급성기 중증 환자보다는 만성기 고령환자가 선호"한다는 게 전부다. 돈 안 되는 환자는 필요 없다는 얘기다.

강릉의료원은 정부가 3백13억 원을 투자해 증축과 리모델링을 마쳤고, 최근에는 도립노인전문병원을 완공하고 5월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도 이를 내다 팔라고 하는 것이다. 원주의료원도 지난해에 건립을 올해 환자 수가 5.2퍼센트, 의료 수입



강원도청 앞 1인 시위 공공병원 매각은 가장 노골적인 의료 민영화다.

이 9.2퍼센트 증가했고 강릉의료원은 각각 15퍼센트, 31.3퍼센트 증가했다.

물론 환자 수 증가에 비해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다. 공공병원이 환자들에게서 그만큼 돈을 많이 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10년 전부터 강원도 지방의료원에 대해 [가해진] 폐업과 매각의 압박"이 이런 수익성 추구

로 이어졌다.

최문순 도지사는 선거 당시 보건 의료노조 등과 지방의료원 강화를 위한 정책 협약까지 했지만 새누리당의 압력에 후퇴해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민주당 도의원들 중 일부는 아예 새누리당의 '민영화' 압력에 힘을 보태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의료원의 적자는 꼭 필요

한 '착한 적자'다. 필수진료과 운용, 필수 의료시설, 저소득층 환자 무료진료, 공공 보건 의료사업 수행 등으로 생긴 적자를 제외하면 적자 규모는 최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 착한 적자

이런 '착한 적자'를 없애고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되던 최소한의 공공의료를 없애고 냉혹한 시장 논리에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내맡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지방의료원 민영화는 노동자들에게는 구조조정을 강요할 것이고 지역의 다른 민간 의료기관에도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한 노동강도 강화 조치가 뒤따를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계속된 폐업과 매각 압박은 지역 주민들이 지방의료원을 불신하게 만들었다. 의료진이 지방의료원을 떠나고 신규 투자를 가로막아 다른 민간 의료기관보다 낙후된 상태로 10년을 버티게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이런 악순환의 늪에 빠뜨려 놓고 이제는 아예 숨통을 끊겠다고 달려들고 있다. 강릉·원주 의료원 민영화 반대 투쟁은 의료 민영화에 맞선 투쟁의 최전선이다. 이 투쟁에 지지와 지원을 보내야 한다.

## 진주의료원 투쟁이 낳은 정치적 성과

경남도지사 홍준표가 환자와 지역 주민들, 노동자들의 반대를 무시하며 진주 의료원 폐업 계획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났다. 국회 국정감사 보고서도 무시하며 기어이 병원을 폐쇄한 홍준표는 최근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노조 사무실도 폐쇄하려고 단전·단수 협박을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은 여전히 끈질기게 싸우고 있다. 비록 여전히 힘겹게 싸우고 있지만, 이 투쟁은 지난 한 해 동안 전체 노동자 운동에 커다란 영감을 줬다.

첫째, 병원 폐업에 맞선 진주의료원 노동자들과 보건 의료노조의 투쟁은 지방

소도시에서 벌어진 사건을 전국적 쟁점으로 키우는 구실을 했다. 단지 반대 여론만으로는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자 현실이 됐다.

### 투쟁의 선순환

도의회 조례를 막으려고 창원과 인근 지역 노동자들이 연대해 도의회 봉쇄 투쟁을 벌였고 서울과 전국에서 '생명버스'가 조직됐다. 도 의회에서 날치기로 조례를 통과시키는 데에만 여러 달이 걸렸고 결국 국회 국정조사까지 받아야 했다. 새누리당은 진주의료원 정상화 계획을 제출하라는 국정조사 결과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고, 홍

준표에게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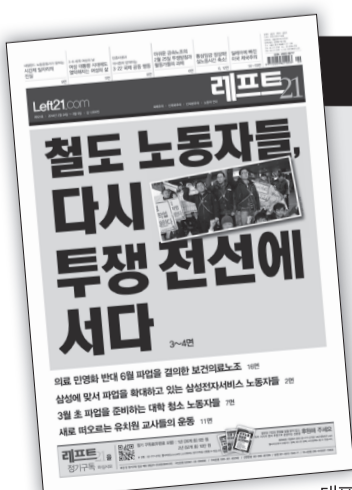
둘째,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투쟁은 철도 등 공공부문 민영화에 반대하는 여론의 밑거름이 됐다. 지난 연말 박근혜 정부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 철도 노동자들도 진주의료원 투쟁을 보며 자극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보건 의료노조가 철도 파업의 바통을 이어받고 있다. 이런 선순환은 더 확장돼야 한다.

셋째, 낙후한 시설, 불친절한 의료진 등 부정적인 이미지로 왜곡돼 온 공공병원이 정부의 많지 않은 지원만으로도 대형 재벌 병원에도 없는 '보호자 없는 병실', '장애인 치과'를 운영하고 갈 곳 없는 노인들의 안식

처 구실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런 공공병원을 폐쇄하려는 자들에 맞선 투쟁이 벌어지면서 개혁적 지식인들이 10년 넘게 제시해 온 '공공의료 강화' 대안도 처음으로 현실적 설득력을 얻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후보조차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내놓고 있는 현실은 이 투쟁이 이 나라 전체에 끼친 영향을 보여 준다.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와 강원도 의료원 민영화 시도에 맞선 투쟁이 이런 경험에서 올바른 교훈을 이끌어 낸다면 광범한 대중의 지지를 받으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노동자연대다함께의 선명 진보 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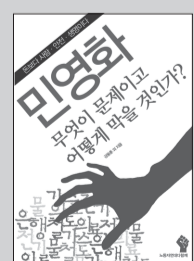
국제주의·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노동자 연대

**레프트21**을 구입하고  
정기구독·후원해 주세요

www.left21.com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left21@left21.com | 웹사이트에서도 구독신청이 가능합니다.

### 추천 소책자



돈보다 사람·안전·생명이야  
민영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강동훈 외 지음  
노동자연대다함께  
4,000원

### 구입 문의

02-2271-2395, mail@workersolidarity.org